

2025학년도 2학기 학력진단평가 2학년 형사법 [OX형] 답안

시험일시 : 2025. 09. 05.(금) 18:00 ~ 20:40

출제교수 : 홍승희 교수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1	○	25년(14회) 변시-문1	대판 2024.5.23., 2021도6357 전합 (판례변경)
2	○	24년10모-문1	형법 제1조 제3항
3	X	21년(10회) 변시-문6	[근거적시 요]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만을 의미한다.
4	X	24년8모-문3	판례(대법원 2002도995 등)는 "자신의 신체활동, 물리적·화학적 행위 등으로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작위범이라고 보며, 그 뒤에 상황을 되돌리지 않은 점에 주목해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
5	X	24년10모-문4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로, 구성요건착오가 됨
6	○	24년10모-문6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7	X	23년(12회) 변시-문3	대판 1986.12.23., 86도1372 “임대인인 피고인 甲의 승낙없이 임차인 A로부터 이 사건 지하실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B가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지하실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온 이상 B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甲으로서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고 위력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그 지하층의 열쇠를 새로 만들어 잠그고 C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B 소유의 의자, 탁자 등을 들어 내게 한 행위는 결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8	X	22년(11회) 변시-문7	실행행위의 정형성에 반한다는 비판은 ‘가. 구성요건모델일치설’에 대한 것이다.
9	○	24년8모-문18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 사용자의 위법행위와 달리, 대체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구성요건상 대항범 관계).
10	X	21년(10회) 변시-문7	변시21/16년8모: 대판 2010도10739 -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11	○	23년6모-문10	대판 2017.6.29., 2017도3196
12	X	23년10모 -문10	대판 1990.2.13., 89도1406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13	○	24년6 -문10	대판 2011.9.2., 2010도17237
14	X	25년(14회) 변시-문9	[근거적시 요] 대판 2022.6.23., 2017도3829 전합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도된 채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더라도,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채권양도인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금전의 소유권 귀속은 채권의 이전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채권 자체와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은 엄연히 구별되므로, 채권양도에 따라 채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의 소유권까지 당연히 채권양수인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다.”
15	○	23년(12회) 변시-문5	대판 2016.5.24., 2015도18795
16	○	24년(13회) 변시-문7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大判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17	○	22년(11회) 변시-문8	대판 2002.6.28., 2000도3045
18	X	25년(14회) 변시-문8	대판 2023.3.30., 2022도6886 “재수사 결과서의 작성 경위나 구성형태에 비추어 재수사 결과란의 기재는 피고인이 재수사 요청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진술내용을 적었음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바 없는 내용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하였으므로, 피해자들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하여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며,”
19	X	22년(11회) 변시-문13	대판 2017.3.15., 2016도19659
20	○	24년8모-문7	대판 2022.6.30., 2021도244
21	X	25년(14회) 변시-문3/ 24년(13회) 변시-문5	대판 2022.6.30., 2022도3413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22	0	24년10모-문20	대판 2015.2.26., 2014도12737
23	X	22년(11회) 변시-문22	대판 1985.11.12., 85도1940]
24	○	25년(14회) 변시-문22	대판 2023.7.13., 2019도7891
25	○	22년(11회) 변시-문21	대판 2017.12.5., 2017도13458]
26	○	23년(12회) 변시-문33	대판 1997.8.27., 97모21
27	X	24년(13회) 변시-문25	[근거적시 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u>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u> (大判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28	○	23년(12회) 변시-문22	대판 2015.2.12., 2012도4842
29	X	25년(14회) 변시-문24/ 23년(12회) 변시-문22	대판 2024.7.31., 2024도8683
30	X	24년10모-문22	대판 2021.12.30., 2019도16259 “ ‘간인’ 은 서류작성자의 간인으로서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이다.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1	X	24년8모-문24	[근거적시 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및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재결 1996.12.26., 94헌바1)에 따라, 참고인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공판에서 번복할 우려만으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즉, 과거 판례와 달리 현재는 증인신문 청구 요건이 엄격해졌고, 단순 번복 염려만으로는 증인신문 청구요건이 불충분함]
32	X	22년(11회) 변시-문26	대판 2011.11.10., 2011도8125 (공범관계의 가능성만으로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33	X	24년(13회) 변시-문21	[근거적시 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 시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하는 이상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 여부를 불문한다(大判 2022도9510).
34	X	25년(24회) 변시-문23	대판 2024.3.28., 2023도15133
35	○	23년(12회) 변시-문35	대판 2022.6.30., 2020모735
36	○	24년6모-문22	대판 2021.7.29., 2020도14654]
37	○	23년10모-문22	대판 2023.9.18., 2022도7453 전합 “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 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38	○	22년8모-문26	대판 2021.11.18., 2016도348 전합
39	○	22년(11회) 변시-문27	대판 2024.9.27., 2024도8454 (공소장변경시 공소시효는 변경된 죄명으로 따져야 “: 대판 2013.7.26., 2013도6182
40	○	24년6모-문25	대판 2021.1.28., 2017도18536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그러나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41	X	22년(11회) 변시-문27	대판 2013.1.31., 2012도13896
42	○	24년(13회) 변시-문24	위 법률조항의 문언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상소심은 원심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전제로 삼았던 사정이나 견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大判 2021도1282).]
43	○	23년8모-문29	대판 2020.10.22., 2020도4140 전합
44	○	22년8모-문29	대판 2020.12.10., 2020도11186
45	○	21년10회 변시-문9	대판 2003.7.25., 2003도2252
46	X		[근거적시 요] 변시21-대판 2010.12.9., 2010도6256 - 장물취득죄에서 ‘취득’ 이라 함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별할 수는 없음
47	○		변시21 - 대결 1997.8.27., 97모21
48	○	23년(12회) 변시-문27	“강제추행죄는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판 2019도15994)
49	○		대판 2019.11.21., 2018도13945
50	○		형소법 제316조 제2항